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2023. 5. 2. 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패널

- | 좌장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 | 발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교수
- | 토론 김형석 통일부 前차관, 대진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①]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개 요

- 주제 :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일시 : 2023. 5. 2.(화) 9시 30시 ~ 1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 참석자
 - 좌장 :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 발제 :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교수)
 - 토론 : 김형석 (통일부 前차관, 대진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

□ 세부 계획(안)

시 간	내 용
1부 09:30~10:00 (30')	○ 개회·국민의례 ○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2부 10:00~11:30 (90')	○ 세미나 (좌장: 신원식 국회의원) (발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교수) (토론) 김형석 (통일부 前차관, 대진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
	○ 추가 자유토론
	○ 폐회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발 제

김 현 옥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교수]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

김 현 옥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교수)

1. 의미

-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복원 및 재건의 의미
-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중국경사,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로 인해 한미동맹은 2급동맹으로 전락.
- 현재 아시아 지역 동맹은 일본, 호주이며, 과거 동북아 동맹이었던 일본과 한국의 위치를 대체하고 있음.
-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개최.
- 12년만의 국빈방문, 10년만의 미 의회연설, 바이든 행정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번째 국빈방문임.

2. 현 국제 상황 및 배경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
- 유럽에서는 나토국가들이 뭉치기 시작함.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나토 가입 국가들도 늘어나기 시작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전략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거론했고, 이에 대해 나토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하나는 나토에 있는 전술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막대한 재래식 무기(massive conventional weapons)로 대응한다는 것임.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다른 양상을 보였음.
- 한국과 일본은 미국확장억제력 제공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
- 일본은
- 한국은 북한의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핵미사일 모의실험 등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핵무력법제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시작함.
-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불안감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음. 핵균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일본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
- 나토는 비전략핵무기와 대량재래식무기(massive conventional weapons)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비례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음.
- 아시아는 미군의 비전략핵무기가 없으며 대량재래식무기도 부재함. 동맹국들의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임.
- 특히, 일본은 연말에 안보관련 문서 3개를 revise할 계획이며, 대만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안보에 해가된다는 인식 (대만과 오키나와현 간 거리는 110km).
- 대만사태는 일본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대만사태시 중국이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은 미국에게 동 지역에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비핵3원칙에 따라 자국영토에 핵반입은 반대이지만, 괌과 같은 지역에 미국의 핵배치를 통한 지역핵우산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미국은 비전략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아시아지역에 미국핵을 배치하는 것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음.

○ 한국의 경우

- 2022년 초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공개한 여론조사는 한국 응답자의 67%가 자체핵무기 보유를 선호하였음.
-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내세웠으며, 또한 최근 북한은 핵 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선제사용 조건을 5가지로 공표하였음.
- 2020년도에 북한의 핵탄두 수는 100개로 추측되었으며, 2027년도에는 24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차보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수량임.

○ 작년도 SCM에서 많은 합의가 도출되었음.

- 북한 핵위협 관련 대응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 측의 견해 및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대응전력의 신속전개를 위한 협의채널이 구체화되었음.

- 또한,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에 합의하였음.
-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음. 이를 통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 수준까지 전개될 수 있도록 함.
- 즉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신에 정례적으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상시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임.
- 핵대응 연습의 연례화에도 합의함.
- 북한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응옵션들을 준비하기로 함.
- 또한, 2023년도 SCM까지 TDS(맞춤형 억제전략) 개선을 완성하기로 함. 이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단계에서 핵사용 단계까지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지를 협의함.
- 또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함.
- 양국은 2023년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3. 주요 성과 및 제언

(1) NCG

- 핵협의그룹을 창설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핵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핵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 핵 및 전략기획의 토의 등을 위한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하였음.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연합교육 및 훈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그 간 한국은 북한의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탄두 공중폭파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북한핵무기의 위협에 시달려왔음.
- 한반도에서는 이미 핵균형이 깨졌고, 북한비핵화 정책 기조 역시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버렸음.
- 가장 좋은 옵션은 한국의 자체핵개발임. 이 경우 원하는 상황에 핵을 사용할 수가 있음. 그 다음 옵션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임. 이 경우 핵균형은 맞출

수 있지만, 원하는 때 핵사용이 보장되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 미국은 한국내 전술핵으로 북한에 대해 보복해 주기 어려울 것임. 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

- 이번 NCG창설은 이 두 가지 옵션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장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옵션임.
-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성명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성명임.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길 원했으며, 실제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음. 한반도에서 핵확산에 우려하기 때문임.
- 어쨌든,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에 대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작년 한해 동안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

- 그 결과는 11월 SCM에서 합의한 결과인데, 한미 양국은 핵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절차, 전략기획, 실행 네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번 NCG는 이 합의를 제도화시킨 중요한 결과임.
- 나토의 NPG는 30여개국에 참여하는 다자그룹이며, 심층적인 협의가 어려움. 또한,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국가는 주로 미국, 영국이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임. 실행 부분에 있어서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투발수단으로 전술핵을 투발하는 훈련 정도에 제한됨.
- 이에 비해 NCG는 양자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며, 전략기획 등 핵운용에 있어 양자 간 심층있는 협의가 가능함. 또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실전연습이 연합사령관 지휘 하에 진행됨.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의과정에 있어서는 NPG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사료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 이 부분은 한국 안보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 부분임.

○ 중국 제20차 당대회에서 동부전구 총사령관(허웨이둥)이 당 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했음.

- 동부전구는 대만침공의 주력부대이며, 현재 시진핑 주석은 이를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7년도에 창군 100주년을 맞게 되며, 2027년도
는 시진핑의 4연임을 결정하는 해이기도 함. 2027년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 중국은 2027년도 7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0년도에는 1000개의 핵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대만사태가 발발할 경우 이는 한국사태로 이어지게 됨.
- 대만사태 발발 시 중국은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저위력 핵무기를 사
용할 수 있음. 또한, 미군의 전력투사를 방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계획할 수 있음. 주한미군 기지 역시 중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일부분이 대만해협으로 진군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존재함.
 - 즉, 대만사태는 단순히 대만해협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모두 연루되는 지역전쟁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즉, 대만사태는 일본사태이며
한국사태임.
 - 향후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만해협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미 간 맞춤형 억제전략 또는 작전계획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협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미일 확장역지 협력이 필요함.
- 한일 간의 안보협력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
오는 것은 아님.
 - 현재 한일 간 군사협정은 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존재하며, 상호군수지원
협정(ACSA)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는 16개국의 전력제공국(sending
states)에 의해 병력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한일 양국은 미국 확장역지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미흡한 이유 중 하나는 양자동맹 체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임.
 -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위협대상은 다르지만, 양국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

과적인 확장역지의 신뢰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미일 3국간에 확장역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미국의 역지력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2) 경제적 성과

- 이번 정상회담에서 IRA법과 반도체법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에 관심이 집중됨.
 - 공동성명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
 - 구체적 해법마련은 향후 정부 및 기업체들이 실무진에서 마련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IRA법: 정부보조금 및 세액공제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산업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점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거 투입
 -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북미 지역에서의 최종 조립, 2) 미국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국에서 생산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핵심광물 사용, 3)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소재 사용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핵심광물은 2027년 이후 80%, 배터리 소재는 2029년 이후 100%의 사용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중국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공급되는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소재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한국 전기차는 리스차량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CHIPS법: 미국의 핵심 미래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정되었는데, 반도체 제조시설 건립 및 첨단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등에 투입
 - 보조금 수령을 위해 생산기지 접근 및 기술공유 허용,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하여 ‘안보위협국’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guardrail) 조항을 도입
 - 현재 가드레일 조항 관련 중국에서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및 확장에 대한 1

년 유예를 받아놓은 상태임.

-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 미국 내 공장 조기 완공, 전기차 제조를 위한 배터리 및 광물 등의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방안, 반도체법 관련 유예기간을 재차 늘리는 방안 등이 존재하나, 근본적 해결방안은 IRA법의 경우 미국 내 공장이 완성되어 made in America 전기를 생산하여야 함. 반도체법의 경우 지나친 기술공개 및 초과이익 공유 조건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한국기업체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줄지가 의문임.
- 미국은 현재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한국 등 외국기업체들이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음. 외국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공장을 건설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한국 기업체들이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 론 (1)

김 형 석

[통일부 前차관, 대진대 교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론문

김 형 석 대진대 교수 (前 통일부차관)

□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평가

○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세계적인 복합적인 갈등 상황속에서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단순 선언이 아닌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됨.

- 특히 한미정상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 상황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결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①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인류보편적 가치 존중’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주었음.

- 즉,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핵 공격시 어떤 정권도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함.

-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기초한 외교적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을 명확히 함.

② ‘행동으로 보장된 확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과 부조화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기대를 차단하고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변화 압박에 대한 북한 부담감을 가중시킴.

-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 지휘센터를 방문, 군사작전 상황을 보고 받고, 한미 양정상이 한미관계가 ‘자유를 위한 투쟁과 용기, 희생,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강조

③ 현존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하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됨.

-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한미가 핵활동 정보와 핵자산 운용 기획, 대응, 실행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하는 등 북핵 위협에 한미가 함께 참여해서 대응

- 미국 핵전력과 한국전투력의 합동 훈련, 실전적 시뮬레이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등 압도적인 확장 억제 태세 구비

④ 한국내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배치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핵확산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입장을 명확히 함.

-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위협대상인 한국이 NPT체제 존중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북핵 개발이 촉발할 수 있는 ‘핵도미노 현상’ 발생을 예방함.
- 특히,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NPT체제 틀속에서 일정부분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됨.

□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 북한은 4.28 김여정의 입장 발표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윤대통령의 방미를 도발 및 핵전쟁 ‘행각’이라고 하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하고 위협하는 태도를 보임.
 -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의지가 반영된 대북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종말’이라는 공개적 표현을 ‘늑은이의 망녕’이라고 비난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하라’고 위협
 - 윤대통령에 대해서는 ‘빈껍데기 선언에 감지덕지해 한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비난
 - 핵전쟁 억제력이외에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제2의 임무’를 운운하면서 한미 군사연습과 핵전략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라 위협함.
-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것으로 앞으로 한미간 후속조치 상황을 보아가면서 ‘입장 표명’ 이외에 다른 양태로 거칠게 반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상황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당면해서는 이미 예고한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함께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표한 ‘국방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핵무력 강화 조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군사훈련 등을 한미의 확장된 억제 조치를 빌미로 실시할 것임.
 - 아울러, 핵무력이 아닌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국지적 도발, 특히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에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경우 지난 2019년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후 현재까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력갱생’과 ‘강대강’의 자세로 미국과의 대결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의 전제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응해 오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와 중국 진영에 편승해서 미국중심의 자유 진영에 대해 대결적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물품 제공과 중국과의 교역 재개 등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o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추종하는 입장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술핵부대 운용연습 등 한국이 북한 핵의 과녁이 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왔던 남북통신선도 차단하고 있음.
- o 이러한 북한의 경직되고 대결적인 자세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음.
 -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하에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할 것임.
- o 앞으로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의 경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 러와의 전략적 협력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 약화시 또는 북한내 악화되는 경제난과 북한내부의 불만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 나고자 남북간 대화무대로 나왔던 전례처럼 우리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

□ 고려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향 (통일 2.0시대)

- o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되었음.
 -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북한의 수사적 위협과 ICBM 등 군사 무력 시위, 군사적 도발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위기감을 과도하게 가질 필요가 없음.
 - 북한의 위협은 '워싱턴 선언'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강화된 확장억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한반도의 긴장 유발은 한 미가 아닌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
 - '북한이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나약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 o '우리의 안보와 평화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의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냉철

한 인식하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 군사적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

-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시 한미는 데프콘 상태 유지하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북한도발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미루나무 절단 작전(폴 버니언 작전)'을 수행함. 이 작전으로 미루나무가 절단되고 그 과정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군 초소가 파괴되었으나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은 없었고 김일성이 유감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여 사태가 종료됨.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남북간 직접 해결노력의 경우 미국에 집중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핵심 당사자 입장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관여와 변화 유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핵문제의 경우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을 방지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기능 정상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고한 이행,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뒷배' 역할을 제지하면서, 한미일 협력하에 양자차원의 제재를 사이버 범죄 차단 등 북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

-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예방 및 북한 변화에 동참하고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유도함.

○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독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고,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우리 주도로 선제적, 공세적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해 내도록 함.

-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힘을 토대로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3D(억제, 단념, 대화) 과정을 거쳐 북한 비핵화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일관되게 노력함. 대화의 경우 성사에 연연하지 않되 계기시에 북한에 대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는 당국회담을 구체 일자와 급을 명시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음. 북한이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인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분위기 조성'이 아닌 북한의 상응조치와 교환하는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

- 당국차원에서 북한에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학술 및 종교 교류 등 비정치적, 비경제적, 비군사적 교류협력으로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동독 주민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함. <끝>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 론 (2)

이 수 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이 수 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한미정상회담의 의의

① 신냉전 시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및 재확립의 주도자 선언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상승에 걸맞게 개최된 금번 한미정상회담은 신냉전시대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 계기
- 한미신뢰회복을 통해 동맹의 정치역학구조에서 한국의 입지가 탄탄해졌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조성
- 즉, 중러에 대해 견고한 한미동맹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중러가 한미동맹을 이간하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을 구축

② 한미신뢰 회복과 정치군사, 경제분야에서의 강력한 동맹을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

-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국제공조 당사자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상쇄시키는 각종 보호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대북주도권을 확보
- 군사적 위협 상쇄로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했으며, 나아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조성

③ 북한굴종이 아닌 새로운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립

-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발언과 행동에 한국사회 내부의 여론이 출렁거릴 정도로 북한의 영향력이 컸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잘못된 관행의 대북정책,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지지와 원동력을 확보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센 공격과 비판은 그만큼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의미

④ 북한체제 변화를 통한 통일선도자 역할을 선언

- 비핵화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로 가는 첩경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북한의 비핵화협상 복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 외교군사경제를 망라하는 총체적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
- 특히 북한인권문제를 한미동맹 차원의 심각한 안보 도전으로 인식

⑤ 한국경제 회복 및 번영의 발판 마련

- 반도체, 첨단산업, 투자유치 등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상호호혜적인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
- 국제안보와 경제 현실의 높은 파고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안보 및 경제결속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잡는 기틀을 마련

2. 한반도 정세 전망

□ 북한의 반응과 예상행동

- 김여정 발언(4.29)에 이어 조선중앙통신 발언(4.30)을 통해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
 - 김여정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한미정상에 대해 막말비난했으며,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는 등 자위권 행사가 증대될 것” 이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북한이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
- 김여정의 말폭탄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우리의 안보역량과 대응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남비난 및 군사도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

- 군사 도발을 암시하는 김여정의 “보다 결정적인 행동” 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예컨대 군사도발로 한미군사적 반응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도발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 o 7차 핵실험 및 여러 종류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충격에 빠트림으로써 모든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
- 핵억제력의 제2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국방력 강화를 병자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

*** 다만 ICBM의 정상각도 발사시 북한의 재진입기술 여부가 관건**

-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을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 공개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가능성도 있음
- o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중러 간의 외교 및 군사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냉전구도질서를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북한은 중러와의 외교, 군사협력으로 동북아를 과거 냉전시대 진영대결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임

□ 중국의 반응과 예상행동

- o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고, 국내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왜곡보도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
- 핵 억제력과 관련한 ‘워싱턴 선언’ 과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인 회담

으로 평가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음

-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함
- 우리의 한미동맹 중시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일단은 과거 사드보복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차원에서 여러 종류의 보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대만문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미국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시행, 한미간의 군사공조를 막으려 함
- 북한이 제의했으나, 중국이 부정적이었던 북중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미군사훈련과 유사한 형태의 군사교류를 진행
-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대한국압박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결속시키며 한국의 미국중시의 외교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 현재 강경한 대한국 비난발언을 구사하나 장기적으로는 한중관계에서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의 예상 반응

- 러시아 외무성 공식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핵확장억제' 계획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
 - “핵무기사용공동계획에 관한 한미합의는 명백히 불안정을 조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안전과 전 지구적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응
- 한미정상회담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

- 구소련시절의 국가적 위상 회복과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해 중국과의 안보, 경제분야 협력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군사강대국으로 등장하기를 기대
-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필수적인 정치·안보·인도·경제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표명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음
-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

□ 북중러 삼각협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무너지면서 기존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군사 갈등까지 발생
 - 21세기 국제질서가 마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형국이나, 미소가 주축이 된 냉전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극적 냉전시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북중러 삼각공조를 통한 한미 동맹 파고를 넘어서려는 시도
- 북한은 북러 외교적 결속과 북중교역의 확대로 전통적인 북방삼각 협력관계 공고화를 도모
 - 북한의 우호적인 대러 담화와 함께, 북중, 북러 열차 및 트럭 운행 재개 이후 북중, 북러 접경지역 교역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임
- 한편으로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여지가 축소되어 독자적 대미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러시아의 집단행동에 반강제적인 공동대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북한이 동맹의 연루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혹은 대유럽 대처 구도에 끌려 들어갈 수 있음

3. 우리의 과제와 대응 방향

□ 군사안보적 현안

-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정부역량을 집중
 - 한미간 분야별 확장억제협력 지속,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주, 사이버 영역 적용문제, 한미일간의 정보공유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
- 최근 북중러가 동시다발적으로 핵무력 증강과 위협공세를 취함에 따라 북중러의 연쇄 핵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 새로운 북한의 게임체인저 무기에 대응해 기존의 3축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편을 통해 북한도발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안보정책의 업그레이드화 달성

□ 대화협력적 현안

-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상황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
 - 한미군사안보적 대응을 기반으로 중러협력, 한미일공조 강화, 국제사회 공조 등 국제협력적, 외교적 노력 역시 배가
-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함
- 한편으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한미동맹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점검
- 국제적 차원에서 사이버안보협력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정보누출 및 교란행위를 방지
- 북한 주민의식의 변화가 북한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나아가 북한당

국의 정책에 반영되어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단계로 이어지도록 미디어매체의 북한실상과 대북선전전을 확대함

-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강화의 기반을 구축

□ 법적, 제도적 보완

○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입법화 및 공론화

- 입법화적 조치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의 후속조치들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마련, 특히 한미 대북정책공조 및 북한인권 문제로 대북관여정책의 구체화 방안 마련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기준을 적용, 국제기구와 NGO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 수시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침해실태기록과 활용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민관학 협력을 추진함

○ 북한주민에 대한 반인도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이 큰 인사를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함

□ 국민적 공감대 조성

○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 회담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세미나, 출간문을 통해 홍보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폄훼와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와 썬크탱크 차원에서 성과와 의의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왜곡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 //끝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 론 (3)

정 성 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정성윤(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워싱턴 선언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조용하는 미국의 전례 없는 환대와 약속 중 단연 백미(白眉)이다. 하지만 신뢰와 합의 그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언에 담긴 다짐과 합의가 실제 북핵 문제에 어떠한 전략적 함의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선언의 취지는 확장억제력 강화이며 그 요체는 NCG의 신설이다. 따라서 평가 요소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여부와 파급효과이며, 그 기준은 선언 이후의 정성적 변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될 것이다.

첫째, NCG는 한국의 전략 환경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이다. 일각에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고 있는 NATO의 핵 기획 그룹(NPG)과 비교하며 NCG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하지만 유럽이 비해 전장이 협소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 이를 공유하는 것은 그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나 역효과도 있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이다. 물론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통념은 유효하다. 하지만 독자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난망하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우리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이 엄중해짐에 따라 그간 전문가 그룹과 역대 정부가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검토했던 대안이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구축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은 당위(當爲)를 넘어 다행스럽다.

둘째, NCG가 성공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핵 억제에 대한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핵 단추를 독점하는 한 NCG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유사시 핵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경우를 단정해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억제에 대한 곡해이며 엄연한 현실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핵 억제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주체보다 핵 보복을 당할 불확실성 자체로 인해 작동된다. 북한이 지금처럼 향후 핵 능력 고도화 도발을 강화함으로써 미 본토와 우리에게 대한 위협을 동시에 높이면, 한미는 자연스럽게 NCG를 통해 대량보복을 포함한 다양한 핵 보복 옵션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북한에게 주지시킬 것이다. 북한이 보복 가능성을 실제 염려하는 순간부터 실제 억제는 작동하기 시작한다. 서유럽 나토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현재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비록 미국 전술핵이 나토 5개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만 그 발사 단추를 해당국에 위임해서가 아니다. NCG는 미국의 핵 관련 최초의 상설 협의체이다. 미국이 같은 북한 핵 위협권에 속해 있는 동맹국 일본에게는 용인하지 않은 핵 협력체이다. 향후 실제 미국 핵무기의 사용 계획과 운용을 한미가 함께 논의하고, 실제 한미의 전략사령부들과 한미연합사령부가 연합해 북핵 대응을 위한 도상 연습이 수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적극적 현시 약속, 특히 전략핵잠수함의 기함은 확장억제력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난망한 상황에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는 2가지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우선 북한의 목표인 이차타격능력 확보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감시 능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은 북한 이차타격능력의 최후 수단인 핵추진잠수함과 SLBM의 효용을 낮출 것이다. 아울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핵 공격 능력은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대신 그 부작용은 줄이는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전술핵무기의 국내 반입에 대해 ‘의도치 않은 확산’을 자제할 수 있는 효용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유사시 북한의 핵 선제타격의 빌미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룹의 우려도

있었다. 전략핵잠수함은 전술핵 배치의 효용은 유사하나, 잠수함 특유의 은닉성으로 인해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워싱턴 선언의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평가해야만 한다. 일각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중·러 3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심지어 신냉전 구도의 심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역내 경쟁 진영의 균형(balancing) 욕구와 필요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은 자연스럽다. 북한도 전통적 우방과의 밀착을 통해 정세장악력의 훼손을 예방하고 핵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역내 질서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중·러가 이번 선언을 이유로 북핵을 용인할 리도 없고, 북한에게 우리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응할 안보적 지원을 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중인 러시아에게 그러한 능력과 여유가 없으며, 중국 또한 대만에 이어 한반도에서까지 미국과의 갈등 전선의 확장·심화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안보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고 신냉전 질서 형성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설사 신냉전적 정세가 형성되어도 글로벌 강대국 경쟁과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이 구조적·직접적 요인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총평과 과제

북한이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강화를 핑계로 우리를 강압하고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다. 북한의 격한 비난과 도발 협박은 오히려 이번 선언이 불법적 핵무장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 스스로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반증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 대한 2차 타격능력 확보와 남한에 대한 전술핵 능력 강화로 한미동맹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이 열려 있다고 자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설정과 무모한 전략 선택은 결국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북한 자신의 안보가 위협에 노출되는 ‘취약성의 창(window of vulnerability)’ 만 열리게 되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향후 이러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야만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워싱턴 선언의 실천과 지속이 뒤따르고 확보되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강력한 북핵 억지 의지와 강화된 구체적 실행 내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머뭇거리면 미국의 의지, 선언의 구속력과 효과를 의심받고 불필요한 국내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북한 비핵화이고 정부 또한 국정과제 추진 과제로 중·러의 건설적 협력 견인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두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두 강대국에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한미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 질수록, 한미 양국의 자연스러운 억제력 강화 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불가피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전략적 우려의 불식과 근원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불용하고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관여 이외에 별 방책이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